

보험법

(保險法)

민국 96년 07월 18일 개정

목 록

제1장 총칙

제1절 정의 및 분류

제2절 보험이익

제3절 보험비

제4절 보험인의 책임

제5절 다중보험

제6절 재보험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통칙

제2절 기본 조항

제3절 특약조항

제3장 재산보험

제1절 화재보험

제2절 해상보험

제3절 육공보험

제4절 책임보험

제4절의 1 보증보험

제5절 그 밖의 재산보험

제4장 인신보험

제1절 생명보험

제2절 건강보험

제3절 상해보험

제4절 연금보험

제5장 보험업

제1절 통칙

제2절 보험회사

제3절 보험합작사

제4절 보험업 대리인, 중개인, 공증인

제4절의 1 동업노조(同業公會)

제5절 벌칙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절 정의 및 분류

제1조 이 법에서 보험이란 당사자가 일방은 타방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타방은 예상할 수 없거나 불가항력의 사고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 재산의 배상을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항의 계약에 근거한 계약을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보험인이란 보험사업의 각종 조직을 경영하고 보험계약의 체결 시 보험금의 청구권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보험으로 담보한 위험 사고의 발생 시 그 담보의 책임에 따라 배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3조 이 법에서 보험신청인이란 보험 목적에 대하여 보험이익을 향유하며 보험인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신청하고 보험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이 법에서 피보험인이란 보험사고의 발생 시 손해를 입고 배상청구권을 향유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신청인 역시 피보험인이 될 수 있다.

제5조 이 법에서 수익인이란 피보험인 또는 보험인이 배상청구권의 향유를 약정한 자로서 보험신청인 또는 피보험인 모두 수익인이 될 수 있다.

제6조 이 법에서 보험업이란 이 법에 따라 조직하여 등기하고 보험 경영을 사업으로 삼는 기구를 말한다.

이 법에서 외국보험업이란 외국 법률에 따라 조직하여 등기하고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쳐 중화민국 국경 내에서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기구

를 말한다.

제7조 이 법에서 보험업 책임자란 회사법(公司法) 또는 합작사법(合作社法)에 따라 마땅히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 이 법에서 보험대리인이란 대리계약 또는 수권서에 근거하여 보험인에게 비용을 수취하고 업무의 경영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8-1조 이 법에서 보험업무원이란 보험업, 보험중개회사, 보험대리인회사를 위하여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 이 법에서 보험중개인이란 피보험인의 이익에 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또는 보수를 수취하는 자를 말한다.

제10조 이 법에서 공증인이란 보험인 또는 피보험인에게 비용을 수취하고 보험목적물 처리하는 심사를 실시하며 배상금의 감정, 협상을 실시하고 증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 이 법에서 각종 준비금이란 책임준비금, 비(非)만기보험준비금, 특별준비금, 배상준비금 및 그 밖의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른 준비금을 말한다.

제12조 이 법에서 주관기관은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行政院金融監督管理委員會)이다. 다만 보험합작사는 그가 경영하는 업무에 있어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무는 합작사의 주관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한다.

제13조 보험은 재산보험 및 인신보험으로 구분한다.

재산보험은 화재보험, 해상보험, 육공(陸空)보험, 책임보험, 보증보험
및 주관기관의 비준을 취득한 그 밖의 보험을 포함한다.

인신보험은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및 연금보험을 포함한다.

제2절 보험이익

제14조 보험신청인은 재산 상의 기존 이익 또는 재산 상의 기존 이익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기대 이익에 대하여 보험이익을 향유한다.

제15조 운송인 또는 보관인은 운송하거나 보관하는 화물에 대하여 그가 부담
하는 책임을 한도로 하는 보험이익을 향유한다.

제16조 보험신청인은 다음 각 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보험이익을 향
유한다.

- 一. 본인 또는 그 가족.
- 二.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지급하는 자.
- 三. 채무인.
- 四. 본인을 위하여 재산 또는 이익을 관리하는 자.

제17조 보험신청인 또는 피보험인의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보험이익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8조 피보험인이 사망하였거나 보험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시 보험
계약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전히 승계인 또는 수양

인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한다.

제19조 합동인 또는 공유인이 연합하여 피보험인이 되었을 시 그 중 1인 또는 수인이 보험이익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보험계약은 그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무릇 유효한 계약에 준하여 발생한 이익은 역시 보험이익이 될 수 있다.

제3절 보험비

제21조 보험비는 1회성 납부 및 분할납부의 두 종류가 있다. 보험계약이 1회성 납부를 규정하거나 분할납부를 규정한 최초의 보험비는 마땅히 계약의 효력 발생 전에 납부하여야 하나 다만 보험계약을 체결할 시 보험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2조 보험비는 마땅히 보험신청인이 계약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신탁업이 신탁계약에 따라 보험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보험비는 마땅히 신탁업이 대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신청인이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은 보험인이 보험신청인의 소득에 대한 항변으로써 역시 수익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3조 동일한 보험이익, 동일한 보험사고, 선의로 체결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의 총합이 보험목적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보험신청인은 그 초과부분을 비율에 따라 보험비의 반환

을 요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이 제37조의 정황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을 시 보험인은 그 정황을 알지 못하는 기한 내에 여전히 보험비를 취득할 수 있다.

제24조 보험계약이 제51조 제2항의 정황으로 인하여 보험인이 구속을 받지 아니할 시 보험인은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접수한 보험비는 반드시 반환할 필요는 없다.

보험계약이 제51조 제3항의 정황으로 인하여 보험신청인이 구속을 받지 아니할 시 보험인은 보험비 및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이미 접수한 경우 마땅히 반환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제60조 또는 제81조의 정황으로 인하여 중지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중지되었을 시 보험비는 시간으로 계산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지 후의 보험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마땅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 보험계약이 제64조 제2항의 정황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을 시 보험인은 반드시 이미 접수한 보험비를 돌려줄 필요는 없다.

제26조 보험비는 보험계약에 기재된 위험 증가의 특별 정황에 따라 계산한 경우 그 정황이 계약의 존속 기간 내에 소멸되었을 시 보험신청인은 계약의 약정 시 보험비율에 따라 그 정황이 소멸되는 시점부터 비율에 따라 보험비를 감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인이 전항의 보험비 감소에 동의하지 아니할 시 보험신청인은 계약을 중지할 수 있다. 중지 후의 보험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마땅히 반

환하여야 한다.

제27조 보험인이 파산 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일로부터 중지되며 중지 후의 보험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보험인은 마땅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 보험신청인이 파산 시 보험계약이 이미 파산한 채권인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나 다만 파산관리인 또는 보험인은 파산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중지할 수 있다. 중지 후의 보험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마땅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4절 보험인의 책임

제29조 보험인은 예상할 수 없거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보험계약에 제한을 명문화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보험인은 보험신청인 또는 피보험인의 과실로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보험신청인 또는 피보험인의 고의로 초래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0조 보험인은 도덕적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 마땅히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1조 보험인은 보험신청인 또는 피보험인의 고용인 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물(物) 또는 동물(動物)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 마땅히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 보험인은 전쟁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 계약에 상반되는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3조 보험인은 보험신청인 또는 피보험인에 대하여 손해를 회피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필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환책임이 있다. 그 상환액수와 배상금액의 합계는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마땅히 상환하여야 한다.

보험인은 전항의 비용 상환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보험목적에 대한 가치의 비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34조 보험인은 마땅히 보험신청인 또는 피보험인에게 증명 문건을 교부한 후 약정한 기한 내에 배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약정기한이 없는 경우 마땅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연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절 다중보험

제35조 다중보험이란 보험신청인이 동일한 보험이익, 동일한 보험사고와 여러 보험인과 각각 여러 개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6조 다중보험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신청인은 마땅히 각 보험인에게 타 보험인의 명칭 및 보험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보험신청인이 고의로 전 조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중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38조 선의로 가입한 다중보험의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목적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보험인은 보험목적의 전체 가치에 대하여 그 보험액의 비례에 따라 부담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총액은 보험목적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절 재보험

제39조 재보험이란 보험인이 그 보험으로 부담하는 위험을 타 보험인에게 보험으로 계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0조 원 보험계약의 피보험인은 재보험인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이 없다. 다만 원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재보험인은 원 보험계약의 보험신청인에 대하여 보험비의 납부를 청구할 수 없다.

제42조 원 보험인은 재보험인이 재보험금의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보험인에 대한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연기할 수 없다.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통칙

제43조 보험계약은 보험증권 또는 잠정 보험증권으로 체결한다.

제44조 보험계약은 보험인이 보험신청인의 신청에 동의한 후에 체결한다.

이해관계인은 모두 보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부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 보험신청인은 위임하지 아니하고서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수익인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보험신청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6조 보험계약은 대리인이 체결하는 경우 마땅히 대리 체결의 의의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47조 보험계약은 합동인 또는 공유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체결하고 그 이익이 전체 합동인 또는 공유인에 미치는 경우 마땅히 전체 합동인 또는 공유인이 체결한 의의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48조 보험인은 보험목적물의 일부분을 약정할 수 있으며 마땅히 보험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위험 발생 시의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항의 약정이 있는 경우 보험신청인은 보험 부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별도로 타 보험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49조 보험계약은 인신보험을 제외하고 지시의 방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보험인은 보험신청인의 소득에 대한 항변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수양

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50조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의 가치를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액미상보험 계약은 계약 상에 보험목적의 가치를 명기하는 경우 반드시 위험 발생 후의 가격 추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평가보험 계약은 계약 상에 보험목적의 일정 가치를 명기하는 보험계약이다.

제51조 보험계약의 체결 시 보험목적의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이미 소멸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하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계약체결 시 오직 보험신청인만이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음을 아는 경우 보험인은 계약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계약체결 시 보험인만이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음을 아는 경우 보험신청인은 계약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제52조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은 약정 시 같은 타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신청인 또는 보험계약에 기재된 확정을 획득할 수 있는 수익인이 그 이익을 향유한다.

제53조 피보험인이 보험인이 보험책임의 부담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제삼자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 보험인은 배상금액을 지급한 후 피보험인의 제삼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

다. 다만 청구한 액수는 배상금액을 한도로 한다.

전항의 제삼자가 피보험인의 가족 또는 고용인인 경우 보험인은 대위 청구권이 없다. 다만 손실이 사고로 초래된 경우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54조 이 법의 강제규정은 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피보험인에게 유리한 경우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의 해석은 마땅히 계약당사자의 의지를 탐색하여야 하며 소용되는 문자에 얽매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의혹이 있을 시 피보험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4-1조 보험계약 중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어 계약의 약정 시의 정황이 현저히 공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부분의 약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一. 보험인이 이 법에 따라 마땅히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거나 경감한 경우.
- 二. 보험신청인, 수익인 또는 피보험인이 이 법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三. 보험신청인 또는 피보험인의 의무를 가중하는 경우.
- 四. 그 밖의 보험신청인, 수익인 또는 피보험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

제2절 기본 조항

제55조 보험계약은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一.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 二. 보험의 목적물.
- 三. 보험사고의 종류.
- 四. 보험책임 개시일자 및 보험기간.
- 五. 보험금액.
- 六. 보험비.
- 七. 무효 및 실권의 원인.
- 八. 계약을 약정한 연, 월, 일.

제56조 보험계약을 변경하거나 효력 정지된 보험계약을 회복할 시 보험인은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절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낙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법에 인신보험에 대하여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57조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마땅히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거나 통지를 소홀히 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타방이 그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58조 보험신청인, 피보험인 또는 수익인이 보험인이 마땅히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계약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알게 된 후 5일 이내에 보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 보험신청인이 보험계약 기간 내에 위험의 증가 정황을 통지한 경우 마땅히 알게 된 후 보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험의 증가가 보험신청인 또는 피보험인의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경우 그 위험이 보험비의 증가하거나 계약을 중지할 정도에 달하는 경우 보험신청인 또는 피보험인은 마땅히 보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험의 증가가 보험신청인 또는 피보험인의 행위로 인하여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신청인 또는 피보험인은 마땅히 알게 된 후 10일 이내에 보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험의 감소 시 피보험인은 보험인이 다시 보험비를 산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60조 보험에 전 조의 정황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별도의 보험비의 결정을 제안할 수 있다. 보험신청인이 별도의 보험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계약은 즉시 중지된다. 다만 전 조 제2항의 정황으로 인하여 계약이 중지될 시 보험인의 손실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인은 위험의 증가를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계속하여 보험비를 수취하거나 또는 위험 발생 후 배상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그 밖에 계속 계약을 유지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전 항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61조 위험의 증가에 있어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을 시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一. 손해의 발생이 보험인의 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二. 보험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三. 도덕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제62조 당사자 일방은 다음 각 관에 대하여 통지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一. 타방이 알고 있는 경우.

二. 통상적인 주의로 타방이 마땅히 알고 있거나 도저히 모를 수 없는 경우.

三.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통지할 필요가 없음을 성명한 경우.

제63조 보험신청인 또는 피보험인이 제58조, 제59조 제3항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인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해 마땅히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4조 계약 체결 시 보험신청인은 보험인의 서면 질의에 대하여 사실대로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신청인이 고의로 은닉하거나 과실로 누락하거나 또는 진실하지 아니한 설명을 하여 보험인의 위험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거나 감소하기에 충분한 경우 보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위험이 발생한 후에도 역시 동일하다. 다만 보험신청인이 위험의 발생이 그 설명 또는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시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계약해제권은 보험인이 해제 원인을 알게 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또는 계약 성립 후 2년이 경과하면 즉시 해제 원인이 있어도 역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제65조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청구일로부터 시작하여 2년이 경과하여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음 각 관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그 기한의 기산은 각 관의 규정에 따른다.

- 一. 보험신청인 또는 피보험인이 위험에 대한 설명을 은닉, 누설하거나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인은 정황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二. 위험 발생 후 이해관계인이 소홀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 정황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三. 보험신청인 또는 피보험인이 보험인에 대한 청구가 제삼자의 청구로 인한 경우 보험신청인 또는 피보험인이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절 특약조항

제66조 특약조항은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기본 조항을 제외하고 특수한 종류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승인하는 조항이다.

제67조 보험계약에 모든 사항은 과거, 현재 또는 미래를 불문하고 모두 특약조항으로 정한다.

제68조 보험계약 당사의 일방이 특약조항을 위반하였을 시 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위험이 발생한 후에도 역시 동일하다.

제64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정황에 준용한다.

제69조 미래에 관한 사항의 특약조항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그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약정지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은 이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재산보험

제1절 화재보험

제70조 화재보험인은 화재로 인한 보험목적물의 훼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보험목적물의 구제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의 위험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71조 집합된 물(物)에 대하여 총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인의 가족, 고용인 또는 동거인의 물 역시 보험목적물이 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에 명기하고 위험의 발생 시 그 손실에 대하여 배상을 향유할 수 있다.

전항의 보험계약은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72조 보험금액은 보험인이 보험기간 내에 책임을 부담하는 최고한도액이다.

보험인은 마땅히 보험부담 전에 보험목적물의 시가를 조사하고 보험부담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 보험목적은 보험신청인이 주관기관의 결정을 거친 요율 및 조항에 따라 가치를 정하거나 또는 가치를 정하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목적은 약정된 가치를 보험금액으로 하는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 시 실제 가치를 기준하여 배상을 계산하고 그 배상금액은 보험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 제73조에서 전체 손실이란 보험목적의 전부 멸실 또는 훼손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또는 회복비용이 보험목적의 원상복원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5조 보험목적물이 시가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그 가치를 약정할 수 있다. 배상 시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76조 보험금이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기만으로 인하여 성립된 경우 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손실이 있는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만한 정황이 없는 경우 정가의 보험을 제외하고 그 계약은 오직 보험목적물의 가치의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다.

기만한 정황이 없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가치를 초과한 사실을 타방에게 통지한 후 보험금액 및 보험비는 모두 마땅히 보험목적물의

시가 비례에 따라 감소한다.

제77조 보험금액이 보험목적물의 시가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인의 부담은 보험금액으로 보험목적물의 가치 비례에 따라 정한다.

제78조 손실의 계산이 보험인에 귀책 사유로 인하여 연기된 경우 마땅히 피보험인에게 목록을 교부하고 1개월 이후에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손실목록을 교부한 후 2개월 이후에도 손실이 아직 계산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인은 먼저 마땅히 얻어야 하는 최저한도의 배상금액을 우선 납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79조 보험인 또는 피보험인이 손실의 증명 또는 추산을 위하여 지급한 필요 경비는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인이 부담한다.

보험금액이 보험목적물의 가치에 달하지 아니할 시 보험인은 전항의 경비에 대하여 제77조가 규정하는 비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제80조 손실을 계산하기 전에 보험신청인 또는 피보험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손실의 확대를 피하기 위하여 보험인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목적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 보험목적물이 보험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완전히 멸실되었을 시 보험계약은 즉시 중지된다.

제82조 보험목적물에 부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인과 보험신청인은 모

두 계약을 중지할 권리가 있다. 중지 후 이미 납부된 미손실부분의 보험비는 마땅히 반환하여야 한다.

전항의 계약중지권은 배상금액을 지급한 후 1개월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보험인은 계약을 중지할 시 마땅히 15일 이전에 보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신청인과 보험인이 모두 계약을 중지하지 아니할 시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인은 이후의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에 있어 그 책임은 보험금액을 배상한 후의 잔여액에 한한다.

제82-1조 제73조에서 81조까지의 규정은 해상보험, 육공보험, 책임보험, 보증보험 및 그 밖의 재산보험에 준용한다.

제123조 및 제124조의 규정은 1년이 초과한 재산보험에 준용한다.

제2절 해상보험

제83조 해상보험인은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상의 모든 사고 및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멸실 및 비용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84조 해상보험에 대하여 해상법(海商法)의 해상보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절 육공보험

제85조 육상, 강하천 및 항공분야의 보험인은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상, 강하천 및 항공의 모든 사고 및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멸실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86조 화물의 보험에 대하여 계약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부 시 그 목적지의 화물 인수 시점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한다.

제87조 보험계약은 제55조의 규정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一. 운송노선 및 방법.
- 二. 운송인의 성명 및 상호의 명칭.
- 三. 교부 및 화물 인수 지점.
- 四. 운송에 기한이 있는 경우, 그 기한.

제88조 운송 상의 필요로 인하여 잠지 정지하거나 운송 경로 또는 방법을 변경할 시 보험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전히 보험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89조 강하천을 운행하는 선박의 운임비 및 화물 적재에 관한 보험은 이 절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상보험의 유관조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책임보험

제90조 책임보험인은 피보험인이 제삼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마땅히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여 배상청구를 받았을 시 배상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제91조 피보험인이 제삼자의 청구를 받아 항변할 시 지출한 소송 상의 또는 소송 외의 필요 경비는 계약에 별도로 약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인이 부담한다.

피보험인은 보험인에게 전항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92조 보험계약을 피보험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손실 배상책임을 위하여 체결한 경우 피보험인의 대리인, 관리인 또는 감독인이 부담하는 손실배상책임 역시 보험이익을 향유하며 그 계약은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93조 보험인은 피보험인이 제삼자의 그 책임으로 인한 승인, 조정 또는 배상에 대하여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구속을 받지 아니하도록 약정할 수 있다. 다만 보험신청인 또는 피보험인이 보험인에게 참여하였음을 통지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거나 다른 이유를 구실로 연기하는 경우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94조 보험인은 제삼자가 피보험인이 마땅히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고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기 전에 배상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피보험인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보험인의 제삼자에 대한 손실배상책임의 확정 시 제삼자는 보험금액

의 범위 내에서 마땅히 획득할 수 있는 비례에 따라 직접 보험인에게
배상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 보험인은 피보험인의 통지로 직접 제삼자에게 배상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절의 1 보증보험

제95-1조 보증보험인은 피보험인이 피고용인의 불성실한 행위 또는 그 채무
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95-2조 피고용인의 불성실한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를 보증하는 보증보
험계약은 제55조가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마땅히 다음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一. 피보험인의 성명 및 주소.

二. 피고용인의 성명, 직책 또는 그 밖의 피고용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방식.

제95-3조 채무인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은 제55조
가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 이외에도 마땅히 다음의 사항을 명기
하여야 한다.

一. 피보험인의 성명 및 주소.

二. 채무인의 성명 또는 그 밖의 채무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식.

제5절 그 밖의 재산보험

제96조 그 밖의 재산보험이란 화재보험, 해상보험, 육공보험, 책임보험 및 보증보험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무형의 이익을 보험 목적으로 하는 각종 보험을 말한다.

제97조 보험인은 수시로 보험목적물의 권리를 조사하여 전부 또는 일부분이 비정상적 상태에 처해있음을 발견하면 보험신청인 또는 피보험인의 복원을 거친 후 재차 사용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만약 보험신청인 또는 피보험인이 건의를 수용하지 아니할 시 서면으로 보험계약 또는 그 관련 부분의 중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98조 보험인은 보험신청인 또는 피보험인이 보험목적물에 약정한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초래된 손실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험사고의 발생 후 감정을 통하여 보험신청인 또는 피보험인이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보험목적물을 보호하지 아니하여 증가한 손실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인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99조 보험목적물이 부분적 손실이 발생하고 배상을 거쳐 또는 원상을 회복한 경우 보험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다만 원 보험정황과 차이가 있을 시 그 보험비용을 증감할 수 있다.

제100조 (삭제)

제4장 인신보험

제1절 생명보험

제101조 생명보험인은 피보험인이 계약에서 규정한 연한 내에 사망하거나 계약에서 규정한 연한이 만료하여도 여전히 생존하였을 시 계약에 따라 보험금액 지급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02조 생명보험의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의 규정에 따른다.

제103조 생명보험의 보험인은 보험신청인 또는 수익인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삼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제104조 생명보험계약은 본인 또는 제삼자가 체결할 수 있다.

제105조 제삼자가 체결한 사망보험계약은 피보험인의 서면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금액을 약정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하다.

피보험인의 전항에 따른 동의는 수시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방식은 서면으로 보험인 및 보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보험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그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험신청인이 보험계약을 중지한 것으로 본다.

제106조 제삼자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권리 이전 또는 저당 설정은 피보험인의 서면 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07조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시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미성년자 또는 심신이 상실 또는 정신이 미약한 자가 피보험인 경우 장례비용의 지급

을 제외하고 사망잔여 지급금 부분은 무효하다.

전항의 장례비용의 보험금액은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8조 생명보험계약은 제55조가 규정하는 기재사항을 제외하고 다음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一. 피보험인의 성명, 성별, 연령 및 주소.

二. 수익인의 성명 및 피보험과의 관계 또는 수익인을 확정하는 방식.

三.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고 및 시기.

四.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감소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제109조 피보험인이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인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의 보험증서 가치준비금을 마땅히 획득하여야 하는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에 피보험인의 고의로 자살하여도 보험인이 여전히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은 약정 2년 후에야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정지가 회복된 보험계약은 2년의 기한은 마땅히 효력정지 회복일로부터 기산한다.

피보험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체포 또는 탈옥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험인은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비가 이미 2년 이상 납입된 경우 보험인은 마땅히 그 보험가치준비

금을 마땅히 획득하여야 하는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0조 보험신청인은 보험인에게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그가 지정하는 수익인 1인 또는 수인에게 지급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전항에서 지정하는 수익인은 보험금의 청구 시 생존한 자에 한한다.

제111조 수익인이 지정되면 보험신청인은 그 보험이익에 대하여 처분권의 포기를 성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전히 계약 또는 유언으로 그를 처분할 수 있다.

보험신청인이 전항의 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 통지하지 아니하고 보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12조 보험금을 피보험인이 사망 시 그가 지정하는 수익인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그 금액은 피보험인의 유산으로 간주할 수 없다.

제113조 사망보험계약에 있어 수익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보험금은 피보험인의 유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14조 수익인은 보험신청인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보험계약에 양도허가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5조 이해관계인은 모두 보험신청인의 보험비 교부를 대리할 수 있다.

제116조 생명보험의 보험비를 만기가 되어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고 후 30일 이내에 교부하지 아니할 시 보험계약의 효력은 정지된다.

최고는 마땅히 보험신청인에게 도달하거나 보험비 교부의 의무를 지는

자의 최후의 주소 또는 거주지에 송달하여야 하며, 보험비는 최고 후
마땅히 보험인의 영업소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효력이 정지된 보험계약은 효력정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
험비, 보험계약이 약정하는 이자 및 그 밖의 비용을 정산한 후 익일 오
전 0시부터 그 효력을 회복한다. 보험신청인은 효력정지일로부터 6개
월 이후에 효력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인은 보험신청인이 효력
의 회복을 신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험신청인이 피보험인의 보험
가격증명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보험인의 위험정도에 중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
인은 그 효력의 회복을 거절할 수 없다.

보험인이 전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보험신청인이 보험가격증명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전항의 보험가격증명을 접수한 후 15일 이
내에 거절하지 아니한 경우 효력회복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보험계약이 규정하는 효력회복 신청기간은 효력정지일로부터 2년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아울러 보험기간의 만료일보다 늦어서도 아니 된
다.

보험인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기한이 만료된 후 계약을 중지할 권리가
있다.

보험계약의 중지 시 보험비용을 이미 2년 이상 납부하고 보험증서 가
치준비금이 있는 경우 보험인은 마땅히 그 보험증서 가치준비금을 반

환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에 보험인이 보험비의 납부를 약정한 경우 대신 납부한 이자가 보험증서 준비가치금을 초과할 시 그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의 신청은 제1항에서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7조 보험인은 보험비용에 대하여 소송으로 납부를 청구할 수 없다.

피보험인이 종신을 기한으로 생존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망보험계약 또는 약간 년 후 보험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만약 보험비용을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시 전조 제5항이 규정하는 기한이 만료된 후 보험인은 단지 보험금액 또는 연금을 감소할 수만 있다.

제118조 보험인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또는 보험신청인의 청구로 인하여 보험금액 또는 연금을 감소할 수 있다. 그 조건 및 감소 가능한 액수는 보험계약에 명기하여야 한다.

보험금액 또는 연금의 감소는 마땅히 원 약정 시의 조건으로 동류의 보험계약 체결의 계산기준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그 감소한 금액은 원 계약의 종료 시점에 이미 가지고 있는 보험증서 가치준비금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영업비용을 감하고 난 후 1회성 교부가 가능한 금액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영업비용은 원 보험금액의 1%에 한한다.

보험금액의 일부가 그 보험비에 있어 1회성 납부로 약정된 경우 그 밖의 부분의 분할 납부로 약정된 보험금의 비납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19조 보험신청인이 보험계약을 중지하고 보험비용이 이미 1년 이상 납부된 경우 보험인은 통지를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해약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그 금액은 보험신청인 마땅히 획득하여야 하는 보험증서가치 준비금의 4분의 3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해약금의 상환 조건 및 금액은 마땅히 보험계약에 명기되어야 한다.

제120조 보험비를 1년 이상 납부한 경우 보험신청인은 보험계약으로 저당을 설정하여 보험인에게 대출할 수 있다.

보험인은 보험신청인의 대출통지를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출 가능한 금액을 대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으로 저당을 설정한 대출에 있어 보험인은 마땅히 대출금 이자가 보험증서 가치준비금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보험신청인에게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신청인이 해당 초과일 전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가 보험증서 가치준비금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정지된다.

보험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지 아니할 시 보험인이 서면으로 보험신청인에게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것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신청인이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은 해당 30일의 차일부터 정지된다.

전 두 항의 효력정지된 보험계약의 효력회복 신청은 제116조 제3하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1조 수익인이 고의로 피보험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또는 비록 사망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수익권을 상실한다.

전항의 정황은 해당 수익인이 수익권의 상실로 인하여 수익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을 시 그 보험금액은 피보험인의 유산으로 본다.

보험신청인이 고의로 피보험인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험인은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보험비를 2년 이상 납부한 경우 보험인은 마땅히 그 보험증서 가치준비금을 마땅히 획득하여야 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마땅히 획득하여야 하는 자가 없을 시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122조 피보험인의 연령 정보가 부실하고 그 실제 연령이 이미 보험인이 규정한 보험연령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피보험인의 연령 정보의 부실로 인하여 지급하는 보험비가 정상적인 액수보다 낮은 경우 보험금액은 지급하는 보험비와 피보험인의 실제 연령의 비례로 감소하여야 한다.

제123조 보험인이 파산 시 수익인의 보험인에 대한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그 보험증서 가치준비금으로 약정에 따른 보험요율의 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보험신청인 파산 시 보험계약에 수익인을

지정한 경우 여전히 수익인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한다.

투자형 보험계약의 투자자산은 같은 투자형 보험의 수익인이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역시 압류 또는 그 밖의 권리 행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제124조 생명보험의 보험신청인, 피보험인, 수익인이 피보험인의 보험증서가 치준비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의 권리가 있다.

제2절 건강보험

제125조 건강보험인은 피보험인의 질병, 분만 및 그로 인한 장애 발생 또는 사망 시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26조 보험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보험인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전항의 검진 비용은 보험인이 부담한다.

제127조 보험계약의 체결 시 피보험인이 이미 질병이 있거나 또는 임신 중인 경우 보험인은 질병 또는 분만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28조 피보험인이 고의로 자살하거나 낙태로 인한 질병, 장애, 유산 또는 사망 시 보험인은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29조 피보험인이 보험신청인과 동일인이 아닐 시 보험계약은 제55가 규정한 기재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관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 피보험인의 성명, 연령 및 주소.

二. 피보험인과 보험인의 관계.

제130조 제102조에서 제105조, 제115조, 제16조, 제123조 및 제124조는 건강보험에 준용한다.

제3절 상해보험

제131조 상해보험인은 피보험인이 의외의 상해를 입거나 그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시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부담한다.

전항에서 의외의 상해란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돌발사고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

제132조 상해보험계약은 제55조가 규정하는 기재사항을 제외하고 다음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一. 피보험인의 성명, 연령, 주소 및 보험신청인과의 관계.

二. 수익인의 성명 및 피보험과의 관계 또는 수익인을 확정하는 방법.

三. 보험금 청구의 사고 및 시간.

제133조 피보험인이 고의로 자살하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상해,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보험인은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4조 수익인이 고의로 피보험인을 상해한 경우 보험금 청구의 권리가 없다.

수익인이 고의로 피보험인을 상해미수인 경우 피보험인은 그 수익권한

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5조 제102조에서 제105조, 제107조, 제110조에서 제116조, 제123조 및 제124조는 상해보험에 준용한다.

제4절 연금보험

제135-1조 연금보험인은 피보험인이 생존기간 또는 특정기간 내에 계약에 따라 1회성 또는 분할로 일정 금액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135-2조 연금보험계약은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을 제외하고 다음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一. 피보험인의 성명, 성별, 연령 및 주소

二. 연금 금액 또는 연금 금액 확정 방법

三. 수익인의 성명 및 피보험인과의 관계

四. 연금 청구 기간, 일자 및 지급 방법

五.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을 감소할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제135-3조 수익인은 피보험인의 생존 기간 내에 피보험인 본인이다.

보험계약에 피보험인 사망 후 연금을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수익인은 제110조에서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5-4조 제103조, 제104조, 제106조, 제114조에서 제124조까지의 규정은 연금보험에 준용한다. 다만 연금지급 기간에 보험신청인은 계약을 중지하거나 보험계약으로 저당을 설정하여 보험인에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제5장 보험업

제1절 통칙

제136조 보험업의 조직은 주식유한공사 또는 합작사에 한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비준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비보험업은 보험 또는 보험과 유사한 업무를 겸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주관기관 또는 목적 사업의 주관기관이 사법경찰기관과 회동하여 단속하며 법원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만약 법인조직인 경우 그 책임자는 관련 채무에 대하여 마땅히 연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항의 임무를 집행할 시 법에 따라 단속된 자의 회계장부 및 문서를 압류 수색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 표지 등 시설을 제거하거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처치를 할 수 있다.

보험업의 조직이 주식유한공사인 경우 그 밖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식은 마땅히 공개발행하여야 한다.

제137조 보험업은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쳐 법에 따라 등기를 설립하며 보증금을 예치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할 수 없다.

보험업이 설립허가를 신청하는데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조건, 절차, 첨부하여야 하는 문건, 발기인, 이사, 감사인과 경영인이 구비하여야 하는 필수 자격조건, 허가의 폐지, 보험계약의 양도, 해산 및 그 밖의 필수 준수 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외국보험업이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쳐 법에 따라 설립등기하고 보증금을 예치하며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지 아니하고서 영업을 개시할 수 없다.

외국보험업은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보험업과 관련된 유관규정을 준용한다.

외국보험업이 설립허가를 신청하는데 구비하여야 하는 조건, 절차, 첨부 서류, 허가 폐지, 영업허가증의 발급, 지사의 설립 조건, 영업항목의 변경, 책임자의 교체 정황, 자금운용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한 보험업은 해당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보험업과 관련된 유관규정을 적용한다.

제137-1조 보험업 책임자의 필수 구비 조건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38조 재산보험업의 재산보험의 경영과 인신보험업의 인신보험의 경영에 있어 동일한 보험업이 재산보험 및 인신보험업무를 겸영할 수 없다. 다만 재산보험업이 주관기관의 상해보험 및 건강보험의 경영을 비준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재산보험업이 전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상해보험 및 건강보험업무를 경영하는데 구비하여야 하는 필수 조건, 업무 범위, 비준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보험업은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겸영할 수 없다. 다만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그 밖의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의 경영을 비준 받은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보험업이 전항의 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경영하는데 있어 외환업무의 경영에 관련되는 경우 반드시 중앙은행(中央銀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합작사는 비사원의 업무를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8-1조 재산보험업은 마땅히 주택지진위험에 관한 보험 가입에 있어 주 관기관이 수립한 위험분산체제를 따라야 한다.

전항의 위험분산체제란 마땅히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주택지진보험기금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재산보험업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지며 같은 기금이 부담하고 국내외에 가입하는 재보험은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정부가 담당한다.

전 두 항의 위험분산기제의 한도액, 보험금액, 보험요율, 각종 준비금의 인출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재단법인이 주택지진보험기금의 모집에 관한 정관, 업무의 범위, 자금

의 운용 및 그 밖의 관리 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주택지진보험기금이 누적한 금액이 상응하는
구제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
요 시 같은 기금은 주관기관이 재정부가 행정원에 보고하여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필요한 자금출처를 취득할 수 있다.

제138-2조 보험업은 인신보험업무를 경영함에 있어 보험금을 일회성 또는
분할납부로 보험계약을 약정할 수 있다.

인신보험의 계약 중 사망 또는 장애에 속하는 보험금 부분은 보험신청
인이 보험 사고의 발생 전에 신탁계약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보
험업이 같은 보험신탁을 담당한 수탁인 중 보험신청인과 피보험인은
마땅히 동일인이어야 하고 같은 신탁계약의 수익인은 보험계약의 수익
인이어야 하며 피보험인, 미성년자, 심신미약 또는 정신박약자에 한한
다.

전항의 신탁지급이 원금에 속하는 부분은 보험지급으로 본다.

보험업은 보험금 신탁업무의 처리에 있어 마땅히 신탁전문계좌를 설치
하고 신탁재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4항의 신탁재산이 유가증권인 경우 보험업은 신탁계좌를 설치하고
신탁재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으로 거래행위를 할 시 제삼
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신탁법(信託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보험업의 보험금 신탁의 처리에 있어 그 자금 운용의 범위는 다음에 한한다.

一. 현금 또는 은행 예금.

二. 공채 또는 금융 채권.

三. 단기 채권.

四. 그 밖의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친 자금 운용 방식.

제138-3조 보험업의 보험금 신탁업무의 경영은 마땅히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쳐야 하며 그 영업 및 회계는 반드시 독립하여야 한다.

보험업은 수탁인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탁인 또는 수익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이익반환 또는 기타의 책임을 담당하기 위하여 배상준비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보험업이 보험금 신탁업무의 경영 신청 허가를 위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조건, 첨부 서류, 허가와 폐지, 인출하여야 하는 배상준비금의 한도, 인출 방식 및 그 밖의 필수 준수 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39조 각종 보험업 자본 또는 기금의 최저 한도액은 주관기관이 각 지역의 경제 상황 및 각종 보험업의 필요를 참작하여 행정원에 비준을 요청한다.

제140조 보험회사는 보험증권 인센티브에 참여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험합작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보험증권 인센티브에 참가하는 자에 한한다.

전 두 항의 보험증권 인센티브의 계산 기준 및 방법은 마땅히 보험계약 중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41조 보험업은 마땅히 자본 또는 기금의 실제 납입 총액의 15%를 국고에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42조 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친 경우 공채 또는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항의 납부 보증금은 영업 정지를 선고받고 법에 따라 청산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다.

유가증권으로 보증금을 대납한 경우 그 이자표 부분은 영업 정지의 선고로 법에 따라 청산을 실시할 시 청산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다.

제143조 보험업은 외부에 대출하거나 보증인 또는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보험업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어 주관기관이 대외적인 대출을 비준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 一. 보증금 지급, 대량 해약 또는 대량 보험증권 대출의 순환의 필요를 위한 경우.
- 二. 경영이 부실한 동종 업종을 합병하거나 인수하는 유효한 계약의 체결.
- 三. 재무 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본성격의 채권의 발행.

제143-1조 피보험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금융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재산보험업 및 인신보험업은 각각 자금을 할당하여 재단법인 안정기금(財團法人安定基金)을 설치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안정기금의 조직 및 관리 등 사항의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안정기금은 각 보험업자가 할당한다. 그 할당 비율은 주관기관이 경제, 금융 발전 상황 및 보험업의 수용 능력을 참작하여 정하며 각 보험업자의 총 보험비용 수입의 천분의 1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안정기금의 누적 금액이 피보험인의 권익을 보장하기에 부족하고 금융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시 주관기관의 동의를 거쳐 금융기관에 대출할 수 있다.

제143-2조 (삭제)

제143-3조 안정기금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一. 경영이 곤란한 보험업에 대한 대출.
- 二. 보험업이 경영이 부실한 동종 업체와의 합병 또는 인수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시 안정기금은 저금리로 대출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三. 보험업이 제1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되거나 영업 정지를 선고 받고 청산하거나 해산을 명령받았거나 또는 인수인이 제149조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구조조정을 신청할 시 안정기금

은 필요 시 같은 보험업을 대신하여 보험신청인, 피보험인 및 수익인의 유효한 계약에 따른 청구를 대신 지급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 보험신청인, 피보험인 및 수익인의 같은 보험업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를 취득할 수 있다.

四. 보험업은 이 법에 따라 구조조정을 실시할 시 피보험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구조조정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협조하기 위하여 보험신청인, 피보험인 및 수익인이 서면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안정기금에서 대신 관계자회의 참석 및 구조조정의 관련 권리의 행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안정기금이 대리 행위를 집행하는 절차 및 그 밖의 필수 준수 사항은 안정기금이 제정하며 주 관기관에 보고하고 등록 비치한다.

五. 주관기관의 위탁을 받아 인수인, 청산인 또는 청산인 직무를 담당 하는 경우.

六.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쳐 청산 능력을 구비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심사 허가하는 경우.

七. 그 밖의 보험 시장의 안정 및 피보험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결정하는 사항.

안정기금이 전항 제1관에서 제3관 및 제7관의 사항을 처리할 시 그 자금운용 시기, 범위 및 한도액은 안정기금이 제정하며 주관기관에 보고 한다.

보험업과 경영이 부실한 동종 업체 간에 합병 또는 인수를 실시하는 계약으로 손실을 입고 제1항 제2관의 규정에 따라 안정기금으로 보조를 신청한 경우 그 금액은 안정기금이 같은 항 제3관이 규정하는 대신 지급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143-4조 보험업의 자기자본과 위험자본의 비율은 200%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필요 시 주관기관은 국제표준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보험업의 자기자본과 위험자본의 비율이 전항이 규정하는 비율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윤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관기관은 그 정황의 경중에 따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나 제한을 가하여야 한다.

전 두 항이 규정하는 자기자본과 위험자본의 범위, 계산방법, 관리, 필요 조치 또는 제한의 방식 및 그 밖의 필수 준수 사항에 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44조 보험업의 각종 보험증권의 조항, 보험비 및 그 밖의 관련 자료는 주 관기관이 각종 보험의 발전 정황에 따라 각각 판매 전에 채택하여야 하는 절차, 심사 및 내용에 착오가 있는지, 부실한지 또는 규정을 위반한 처치 등 사항에 대한 준칙을 규정한다.

보험업무의 건강한 경영을 위하여 보험업은 마땅히 정산인원을 초빙하고 그 중 1인을 지정하여 정산인원으로 보험비율의 제정, 각종 준비금의 계산 및 그 밖의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그 자격조건, 서명 내용, 교육 연수, 징벌 및 그 밖의 필수

준수 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전항의 정산인원의 지정 파견은 마땅히 이사회와 동의를 거쳐야 하며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산인원은 공정 및 공평 원칙에 따라 그가 소속된 보험업무의 이사회 및 주관기관에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의 내용에 허위, 은닉, 누설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그 정황의 경중에 따라 경고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자격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144-1조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보험업은 공보방식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 一. 대형 화재 손실과 관련된 보험업자.
- 二.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경우.
- 三. 공공 이익의 실현에 기초한 경우.
- 四. 효과적으로 보험에 대한 대중 서비스를 강화하는 경우.
- 五. 그 밖의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친 경우.

제145조 보험업이 영업연도가 만료될 시 각각 보험종류, 인출한 각종 보험금의 계산 내용을 특별히 설치한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각종 준비금의 인출 비율, 계산 방식 및 그 밖의 필수 준수 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 기관이 정한다.

제145-1조 보험업이 모든 세금을 완납한 후 이윤을 분배할 시 마땅히 20%

의 법정 이윤적립금을 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이윤적립금이 이미 그 자본총액 또는 기금 총액에 도달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보험업은 정관으로 규정하거나 주주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특별이윤적립금을 제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필요 시 역시 명령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은 이 법이 중화민국 96년 6월 14일에 개정된 조문의 발효한 차기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146조 보험업 자금의 운용은 예금을 제외하고 다음 각 관에 한한다.

- 一. 유가증권.
- 二. 부동산.
- 三. 대출.
- 四. 주관기관이 비준한 전문 프로젝트의 운용, 공공 및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투자의 처리.
- 五. 해외투자.
- 六. 보험투자와 관련된 사업.
- 七. 파생성 상품 거래의 종사.
- 八. 그 밖의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친 자금의 운용.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금은 업자의 권익 및 각종 준비금을 포함한다.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금에 있어 금융기구에 예금한 금액은 같은 보험업 자금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항 제6관의 보험관련 사업은 보험, 금융주식투자, 은행, 채권, 신탁, 신용카드, 금융성 임대, 증권, 선물,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자문사업 및 그 밖의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보험관련 사업을 말한다.

보험업의 투자형 보험업무, 노동퇴직연금 보험업무를 위한 전문 장부는 그 투자 자산의 가치를 기재하여야 한다.

투자형 보험업무의 전문 장부의 관리, 보존, 투자자산의 운용 및 그 밖의 필수 준수 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하며 제1항, 제3항, 제146조 1, 제146조 2, 제146조 4, 제146조 5 및 제146조 6이 규정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전문 장부를 설치한 자산에 있어 보험신청인이 보험계약으로 보험업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운용을 위탁하고 같은 자산을 보험업의 제1항 제7관이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운용하는 경우 마땅히 증권투자신탁 및 고문법(證券投資信託及顧問法)에 따라 투자업무의 전권위임의 겸영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험업이 제1항 제7관의 규정에 따라 파생성 상품거래에 종사하는 조건, 거래범위, 거래한도액, 내부처리절차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46-1조 보험업의 자금은 다음의 유가증권을 구매할 수 있다.

一. 공채, 국고채

二. 금융채권, 양도가능 정기예금, 은행인수환어음, 금융기구가 보증하는 상업어음. 그 총액은 같은 보험업 자금의 35%를 초과할 수 없다.

三. 법에 따라 공개발행을 비준한 회사의 주식. 그 주식의 구매 총액은 같은 보험업 자금의 5% 및 같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실제 자본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四. 법에 따라 공개발행을 비준한 담보가 있는 회사채 또는 등급평가기관의 등급 평가를 거쳐 상당하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그 구매한 회사채의 총액은 같은 보험업 자금의 5% 및 같은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실제 납입자본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五. 법에 따라 공개발행을 비준한 증권투자신탁기금 및 공동신탁기금의 수익증빙.

六. 증권화 상품 및 그 밖의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보험업이 구매한 유가증권. 그 총액은 같은 보험업 자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전항 제3관 및 제4관의 투자 총액의 합계는 같은 보험업 자금의 35%를 초과할 수 없다.

보험업의 제1항 제3관에 따른 투자는 다음 정항 중 하나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一. 보험업 또는 그 대표인이 피투자회사의 이사, 감찰인을 담당하는

경우.

二. 의결권을 행사하여 관계인을 지지하거나 또는 관계인의 이사, 감찰인, 직원이 피투자 금융기구의 이사, 감찰인의 담당을 지지하는 경우.

三. 지정하여 파견한 인원이 피투자회사의 경영인인 경우.

보험업이 제1항 제3관에서 제6관의 규정에 따라 공개발행에 투자하였으나 상장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사모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필수 구비조건, 투자범위, 내용, 투자규모 및 그 밖의 필수 준수 사항에 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46-2조 보험업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투자한 부동산이 즉시 이용하고 수익이 있는 자에 한한다. 그 투자 총액은 개인 용도의 부동산을 제외하고 자금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 용도의 부동산을 구매한 총 금액은 그 업주 권익의 총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업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은 마땅히 합법적인 부동산 감정기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46-3조 보험업의 대출 처리는 다음 각 관에 한한다.

一. 은행 또는 주관기관이 허가한 신용보증기구가 보증하는 대출.

二. 동산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三. 제146조 1의 유가증권으로 저당한 대출.

四. 생명보험업의 각 같은 보험업이 서명발행한 생명보험증권으로 저당한 대출.

전항의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대출에 있어 모든 기관의 대출금액은 같은 보험업 자금의 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대출 총액은 같은 보험업 자금의 3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업은 제1항 제1관, 제2관 및 제3관에 따라 그 책임자, 직원 또는 주요 주주에 대하여 또는 그 책임자 또는 여신을 처리하는 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담보 대출은 마땅히 충분한 액수로 담보하여야 하며 그 조건은 그 밖의 동류의 대출 대상보다 우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대출이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마땅히 3분의 2 이상의 이사의 출석 및 출석 이사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 이해관계인의 범위, 한도액, 대출 총 잔액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보험업이 제146조 1의 제1항에서 제3항 및 제4관의 모든 회사의 주주 및 회사채의 투자와 제1항 제3관의 같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회사채로 담보한 대출의 합산은 그 자금의 10%와 같은 주식 및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실제 납입자본금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6-4조 보험업 자금으로 해외 투자를 처리할 시 다음 각 관에 한한다.

一. 외환예금.

二. 해외의 유가증권.

三. 해외의 보험회사, 보험대리인회사, 보험중개인회사 또는 그 밖의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친 보험관련 사업의 설립 또는 투자.

四. 그 밖의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친 해외투자.

보험업 자금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투자로 처리한 총액은 주관기
관이 각 보험업의 경영상황을 보고 결정하며 최고 각 같은 보험업 자
금의 45%를 초과할 수 없다.

보험업 자금으로 해외투자를 처리하는 투자의 범위, 투자한도, 심사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46-5조 보험업 자금으로 전문안전에 운용, 공공 및 사회복지사업에 투자
하는 경우 마땅히 주관기관에 비준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비준의 신청
에 있어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는 문서, 절차, 운용 또는 투자의 범위,
한도액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전항의 자금 운용방식이 회사에 대한 주식투자인 경우 제146조 1의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투자의 조건 및 비율은 제146조 1의 제
1항 제3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6-6조 보험업 업자의 권익이 제139조가 규정하는 최저자본 또는 기금
의 최저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보험관련 사
업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제146조 1의 제1항 제3관 및
제3항이 규정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 투자총액은 최고 같은 보
험업 업자의 권익을 초과할 수 없다.

보험업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고 피투자회사와 통제관계와 종속 관계가 있는 경우 그 투자총액은 최고 같은 보험업 업자 권익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보험업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 관련 사업에의 투자, 통제와 종속 관계의 범위, 투자신고방식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46-7조 주관기관은 보험업이 동일인, 동일관계인 또는 동일관계기업에 대한 대출 또는 그 밖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그 한도액, 그 밖의 거래의 범위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전항에서 동일인이란 동일한 자연인 또는 동일한 법인을 말한다. 동일 관계인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 양친 등을 포함하는 혈연 및 본인 또는 배우자가 책임자인 사업을 말한다. 동일 관계기업의 범위는 회사법 제 369조 1에서 제369조 3, 제369조 9 및 제369조 11의 규정을 적용한다.

주관기관은 보험업과 그 이해관계인의 대출 이외의 그 밖의 거래에 종사하는데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그 이해관계인 및 거래의 범위, 의결절차, 한도액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46-8조 제146조 3의 제3항에서 열거한 대출대상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

하여 보험업에 처리를 신청한 대출은 제146조 3의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보험업에 처리를 신청한 대출의 종목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이 사용하거나 그 항목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자의 소유로 이전할 시 전항에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업에 처리를 신청한 대출로 추정한다.

제146-9조 보험업이 유가증권을 소유하여 주주권리를 행사할 시 주권을 교환하거나 이익을 양도하는 정황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보험신청인, 피보험인 또는 수익인의 이익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업은 피투자회사의 주주회에 출석하기 전에 마땅히 의결권을 행사하는 평가 분석을 설명서로 작성하고 각 같은 회차의 주주회에 의결권을 행사한 서면기록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업 및 그 소속회사는 피투자회사의 위탁서 요구인을 담당하거나 또는 타인이 위탁서 요구인이 되도록 위임할 수 없다.

제147조 보험업은 재보험의 출수재를 처리하거나 그 밖의 위험분산체제 업무의 방식, 한도액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47-1조 보험업이 재보험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전문적인 재보험업으로 간주하며 제138조 제1항, 제143조 1, 제143조 3 및 제1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전문 재보험업의 업무, 재무 및 그 밖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48조 주관기관은 수시로 인원을 파견하여 보험업의 업무 및 재무상황을 조사하거나 보험업이 기한 내에 영업상황을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전항의 조사에 있어 주관기관은 적당한 기구 또는 전문적인 경력인원에 위탁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그 비용은 조사를 수용하는 보험업이 부담한다.

전 두 항의 조사인원이 직무를 집행할 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보험업 책임자 및 관련 인원은 이를 회피, 방해 또는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一. 보험업이 제148조 1의 제1항이 규정하는 각종 서류를 제공하고 증명한건, 영수증, 장부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
- 二.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관련 인원 에 대한 질의.
- 三. 보험업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인원이 직무를 집행할 시 조사한 사실 및 증거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주관기관의 허가를 취득한 후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一. 조사를 수용하는 보험업의 관계기업이 재무보고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장부, 문건을 조사하거나 또는 관련있는 직원

에 대한 질의.

二. 그 밖의 금융기구에 같은 보험업과 그 관계기업 및 명의를 이용한 협의가 있는 거래자에 대한 거래자료의 조사.

전항의 관계기업의 범위는 회사법 제369조 1에서 제369조 3, 제369조 9 및 제369조 11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8-1조 보험업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그 영업상황을 자금운용 정황과 함께 보고서로 작성하여 자산부채표, 손익표, 주주권익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이윤분배 또는 손실충당에 관한 의안 및 그 밖의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항목을 작성하여 회계사의 조사 검증을 거치고 주주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거친 후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등록 비치하여야 한다.

보험업은 전항이 규정하는 재무업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주관기관이 그 필요에 따라 보험업이 규정된 기한 내에 규정된 양식 및 내용에 따라 업무 및 재무 상황을 주관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구에 보고하거나 장부, 서류, 전표 또는 그 밖의 재무업무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 두 항의 재무보고서의 작성 준칙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48-2조 보험업은 마땅히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재무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설명 문건을 공개적으로 열람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보험업은 소비자 대중의 권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대한 소식이 있

을 시 마땅히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자발적으로 공개설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설명문건 및 전항의 중대한 소식의 내용, 공개시기 및 방식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48-3조 보험업은 내부통제 및 감찰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보험업은 자산품질에 대한 평가, 각종 준비금의 인출, 기한 초과 대출, 독촉대금의 정산, 회수불능대금의 전환 및 보험증권의 모집과 손실 보상에 대하여 마땅히 내부 처리제도 및 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49조 보험업이 법령, 정관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경영에 장애가 있을 시 주관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거나 기한부 개선을 명령하는 것 이외에도 정황에 따라 다음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一. 그 경영 또는 자금운용 범위의 제한.
- 二. 보험상품의 판매 중지 명령 또는 그 보험상품 처리의 제한.
- 三. 증자의 명령.
- 四. 경영인 또는 직원에 대한 직무 해제의 명령.

보험업이 전항의 처분에 불복하면 주관기관은 그 정황에 따라 각각 다음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 一. 법정회의 의결안의 취소.

二. 이사, 감찰인(감사)의 직무의 해제 또는 일정 기간 내의 직무 집행의 정지.

三. 그 밖의 필요한 처치.

전항 제2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 감찰인(감사)의 직무를 해제할 시 주 관기관이 회사(합작사)가 등기한 주관기관에 그 이사, 감찰인(감사)의 등기 말소를 통지한다.

보험업은 업무 또는 재무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거나 계약의 책임을 이행할 방법이 없거나 피보험인의 권익에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시 주관기관은 정황의 경중에 따라 다음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一. 감독관리.

二. 인수관리.

三. 영업정지 및 정리의 명령.

四. 해산의 명령.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 인수관리, 영업정지 정리 또는 해산을 실시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그 밖의 보험업, 보험관련 기구 또는 전문적인 경력인원에 위탁하여 감독관리인, 인수관리인, 정리인 또는 청산인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안정기금의 보상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있을 시 마땅히 안정기금에 처리의 협조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주관기관의 위탁을 받은 관련 기구 또는 개인은 위탁사항을 처

리할 시 정부구매법(政府採購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험업은 인수관리를 받거나 영업정지 및 정리 명령을 받았을 시 회사법의 임시관리인 또는 조사인에 관한 유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구조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외에도 그 밖의 구조조정, 파산, 조정의 요청 및 강제집행 절차를 당연히 중지하여야 한다. 인수관리인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구조조정을 신청하는데 같은 인수관리를 수용하는 보험업이 인수관리를 수용하기 전에 이미 구조조정을 요청한 경우 법원에 합병 심리 또는 재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시 법원은 재정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질의할 수 있다.

보험업이 주관기관의 제4항 제1관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 처분을 내릴 시 감독관리인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업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一. 대금의 지급 또는 재산의 처분이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행위.
- 二.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대한 의무를 승낙하는 행위.
- 三. 그 밖의 재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감독관리인은 감독관리직무를 집행할 시 제148조의 조사에 관한 유관규정을 준용한다.

보험업의 감독관리 또는 인수관리의 절차, 감독관리인과 인수관리인의 직권, 비용의 부담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

이 정한다.

제149-1조 보험업은 주관기관의 인수관리처분 통지를 접수한 후 마땅히 그 업무의 경영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인수관리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원래의 주주회, 이사, 감찰인 또는 유사기구의 직권은 즉시 중지된다. 보험업의 이사, 경영인 또는 유사기구는 마땅히 업무 및 재무와 관련된 모든 장부, 문건과 재산목록표를 인수관리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사, 감찰인, 경영인 또는 그 밖의 직원은 인수관리인의 업무 또는 재무 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의 의무가 있다.

제149-2조 보험업이 인수관리를 수용하는 기간 동안 주관기관은 그 신규업무의 승계, 유효한 보험계약의 변경 또는 중지의 수리, 보험신청인 및 보험계약을 저당한 대출 또는 보험계약의 해약금의 상황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인수관리인은 직무 집행에 다음의 행위가 있을 시 마땅히 사전에 주관기관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 一. 증자 또는 감자 후 재증자하는 행위.
- 二. 전부 또는 부분 영업, 자산 또는 부채를 양도하는 행위.
- 三. 그 밖의 보험업과 합병하는 행위.
- 四. 그 밖의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중요한 사항.

인수관리인은 보험업을 인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전부의 영업, 자산 또는 부채를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의 가능성이 있어 마땅히 법원에

구조조정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주관기관에 정리 처분을 내리도록 보고하고 요청하여야 한다. 상술한 기간은 필요 시 인수관리인이 주관기관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인수관리인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구조조정을 요청할 시 주관기관이 제시한 재무업무 조사보고서 및 의견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정할 수 있다.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는 보험업의 구조조정 시에 우선 변제권이 있으며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의 신고를 면제한다.

인수관리인이 이 법에 따라 구조조정을 요청한 보험업은 공개적으로 주식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지 아니한 회사에 한하며 그 구조조정은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법의 구조조정에 관한 유관규정을 준용한다.

인수관리를 수용하는 보험업이 제2항 제2관의 규정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 영업, 자산 또는 부채를 양도할 시 인수관리를 수용하는 보험업의 유효한 보험계약의 보험요율과 당시 정황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보험요율을 인상하거나 그 보험금액을 인하하지 아니하여 그 밖의 보험업이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수관리인은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그 보험요율 또는 보험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9-3조 감독관리, 인수관리의 기한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감독관리, 인수관리 기간에 감독관리, 인수관리의 원인이 소멸되면 감독관리인, 인

수관리인은 마땅히 주관기관에 감독관리, 인수관리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인수관리기간이 만료하거나 또는 비록 만료하지 아니하였으나 주관기관이 인수관리의 중지를 결정할 시 인수관리인은 마땅히 경영하고 있는 관련 업무 및 재무 상의 모든 장부, 문서와 재산을 목록을 작성하여 같은 보험업의 대표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49-4조 제149조에 따라 해산 처분을 한 경우 그 청산 절차는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법의 주식유한공사의 청산에 관한 유관규정을 적용한다. 합작사인 경우 합작사법의 청산에 관한 유관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회사법 제335조의 특별청산원인이 있는 경우 모두 회사법의 주식유한공사의 특별청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149-5조 감독관리인, 인수관리인, 정리인 또는 청산인의 보수 및 직무의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감독관리, 인수관리, 정리, 청산을 수용하는 보험업이 부담하여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전항의 보수는 마땅히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149-6조 보험업은 주관기관의 제1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관리, 인수관리, 영업정지 및 정리의 명령 또는 해산의 명령 처분을 받았을 시 주관기관은 같은 보험업 및 그 책임자 또는 위법한 혐의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유관기관 또는 기구에 그 재산의 이전, 납부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설정을 금지할 것을 통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출입국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에 그 출국의 제한을 서신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149-7조 주식유한공사가 조직한 보험업이 제149조 2의 제2항 제2관의 인수관리를 수용하는 보험업이 양도한 영업, 자산 또는 부채를 수양할 시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一. 주식유한공사가 전체 영업, 자산 또는 부채의 수양은 기발행한 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주주가 출석하는 주주회를 거쳐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로 실시한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주주는 주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없으며 회사법 제185조에서 제18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를 면제한다.

二. 채권 양도에 관한 통지는 공고의 방식으로 처리하며 민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를 면제한다.

三. 채무를 승계할 시 민법 제301조의 채권인 승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처리를 면제한다.

四. 주관기관이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시장 경쟁에 대하여 중대한 불리한 영향이 없을 시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에 따른 행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면제한다.

보험업이 제149조 2의 제2항 제3관과 인수관리를 수용하는 보험업이 합병할 시 전항의 제1관 및 제4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이외에도 해산 또는 합병의 통지는 공고의 방식을 채택하여야 하며 회사법 제316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를 면제한다.

제149-8조 보험업의 정리는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정리인이 실시하며 인원을 파견하여 정리의 감독을 진행할 수 있다.

정리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一. 현 직무의 마무리.

二. 채권의 수취, 채무의 청산.

보험업은 주관기관의 영업정지 정리의 처분을 받았을 시 제149조 1, 제149조 2의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리인은 제2항의 직무를 집행할 시 보험업을 대표하는 소송 상 및 소송 이외의 모든 행위에 대한 권리를 대표한다.

다만 보험업의 영업, 자산 또는 부채를 양도하거나 그 밖의 보험업과 합병할 시 마땅히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그 밖의 보험업이 보험업의 영업, 자산 또는 부채를 정리하거나 그와 합병할 시 마땅히 전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정리인이 직무 집행에 있어 가압류, 가처분을 요청할 시 담보의 제공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9-9조 정리인은 취임 후 마땅히 즉시 보험업 소재지의 일보에 3일 이상 공고하여 채권인이 30일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하도록 독촉하고 기한이 만료되어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리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리인이 명백히 알고 있는 채권은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정리인은 마땅히 즉시 보험업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신고 기한이 만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자산부채표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정리계획 제정하여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등록하며 자산부채표는 보험업 소재지의 일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리인은 제1항이 규정하는 신고기한 내에 채권인에 대하여 변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미 상환기한이 만료한 직원의 보수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49-10조 보험업은 주관기관의 영업정지 명령으로 정리를 진행할 시 제삼자는 같은 보험업의 채권에 대하여 소송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확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 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리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면 행사할 수 없다.

전항의 채권은 소송으로 인하여 분배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정리인은 정리분배 비율에 따라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잔여 재산으로 그 밖의 채권인에게 분배할 수 있다.

다음 각 관의 채권은 정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一. 채권인이 정리절차에 참여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 二. 보험업의 정지일 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 三. 벌금, 과태료 및 추징금.

보험업의 정지일 전에 보험업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 입류권 또는 유치

권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 별제권이 있다. 별제권이 있는 채권인은 정리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행사한 후에도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은 정리 절차에 따라 정리채권에 포함하도록 신고할 수 있다.

정리인이 정리직무의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및 채무는 마땅히 채권의 정리보다 우선하여야 하며 수시로 정리를 수용하는 보험업의 재산에서 상환하여야 한다.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채권 또는 정리인이 명백히 알고 있어 정리에 포함한 채권은 그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면 정리완료일로부터 다시 기산한다.

채권인이 정리절차에 따라 이미 변제를 받은 경우 그 채권의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같은 보험업의 청구권에 대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정리가 완료된 후 만약 분배 가능한 재산을 다시 발견하였을 시 마땅히 추가로 분배하여야 하며 정리 절차에 포함한 채권인이 변제를 받은 후 잔여액이 있을 시 제3항이 채권인은 여전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9-11조 정리인은 마땅히 정리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리기한 내의 수지표, 손익표 및 각종 장부를 구비하여 수지표 및 손익표를 보험업 소재지의 신문지 및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홈페이지 상에 공고한 후 주관기관에 보험업 허가의 폐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허가가 폐지된 보험업은 영업정지 시점으로부터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래의 정리절차는 청산절차로 본다.

제150조 보험업이 해산하여 청산할 시 마땅히 그 영업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절 보험회사

제151조 보험회사는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법의 주식유한공사에 관한 유관규정을 적용한다.

제152조 보험회사의 주식은 무기명식을 채택할 수 없다.

제153조 보험회사가 보험법을 위반하고 업무를 경영하여 자산이 채무의 변제에 부족할 시 그 이사장, 이사, 감찰인, 총경리 및 같은 항목의 업무의 결정을 담당하는 경리는 회사의 채권인에 대하여 마땅히 무한한 연대 상환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전항의 마땅히 무한한 연대 상환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자에 대하여 유관기관 또는 기구에 그 재산의 이전, 납부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설정을 금지하도록 통지하고 아울러 출입국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에 그 출국을 제한하도록 서신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책임은 각 같은 책임자의 사직 등기일로부터 만 3년이 되면 해제된다.

제154조 (삭제)

제155조 (삭제)

제3절 보험합작사

제156조 보험합작사는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 합작사법 및 유관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7조 보험합작사는 합작사법에 따라 자본금을 모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기금을 모집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금은 공적금을 기금 총액과 동일하게 적립하지 아니할 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8조 보험합작사는 사원이 퇴사할 시 현존하는 재산이 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면 퇴사한 사원은 여전히 퇴사 전의 마땅히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을 여전히 부담한다.

제159조 보험합작사의 이사는 그 밖의 합작사의 이사, 감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0조 (삭제)

제161조 보험합작사의 사원은 보험합작사에 마땅히 지급하여야 하는 자본금 및 기금에 대하여 보험합작사의 채권으로 상호 상쇄할 수 없다.

제162조 재산보험합작사의 예정사원 인원수는 300명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인신보험합작사의 예정사원인원수는 500명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제4절 보험업 대리인, 중개인, 공증인

제163조 보험업의 중개인, 대리인, 공증인은 주관기관에 등기하고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개업증서를 수령하지 아니하면 업무를 집행할 수 없다.

전항의 중개인, 대리인, 공증인 또는 그 밖의 개인 및 법인은 주관기관의 기준을 거치지 아니한 보험업을 위하여 보험업무를 경영하거나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4조 보험업 대리인, 중개인, 공증인은 마땅히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금 또는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65조 보험업 대리인, 중개인, 공증인은 마땅히 고정된 업무장소가 있어야 하며 전문 장부를 설치하여 업무의 수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절의 1 동업노조(同業公會)

제165-1조 보험업, 보험대리회사, 보험중개인회사, 보험공증인회사는 동업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영업할 수 없다. 동업노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대하여 부당한 조건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5-2조 동업노조는 회원의 건전한 경영 및 동업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하여 마땅히 다음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一. 공동의 업무 규정, 자율규범 및 각종 실무작업 규정을 설정하고 주

관기관에 보고하여 등록비치한 후 회원에게 준수하도록 한다.

二. 회원이 경영하는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분쟁을 중재한다.

三. 주관기관이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항을 처리한다.

四. 그 밖의 보험업무의 발전 및 노조임무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한다.

동업노조는 전항의 사항을 처리할 시 회원이 관련 자료 또는 설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65-3조 동업노조의 업무, 재무 규범과 감독,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책임자와 업무인원의 자격 요건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규칙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65-4조 동업노조의 이사, 감사가 법령을 위반하고 같은 노조의 정관, 규장의 준수에 태만하며 직권을 남용하거나 성실신용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관기관은 동업노조가 해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65-5조 주관기관은 보험시장의 완비 또는 피보험인의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시 동업노조에 그 정관, 규장, 규범 또는 의결안을 변경하거나 참고, 보고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의 일정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65-6조 동업노조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원 또는 그 회원대표가 정관, 규장, 자율규범, 회원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필요한 처치를 할 수 있다.

제165-7조 동업노조의 정관의 변경 및 이사회, 감사회 회의의 기록은 마땅히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등록비치하여야 한다.

제5절 벌칙

제166조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보험업무를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하며 신대만폐 3백만원(NT)¹ 이상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 비보험업이 보험을 경영하거나 보험과 유사한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신대만폐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그 범죄소득이 신대만폐 1억원 이상에 달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대만폐 2천 5백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법인이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행위책임자를 처벌한다.

제167-1조 제16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대만폐 90만원 이상 4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2조 제177조가 규정하는 보험대리인, 중개인, 공증인의 관리규칙을 위반한 경우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기한부로 시정하거나 신대만폐 90만원 이상 4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

¹ NT : 대만의 화폐단위. 이하 화폐단위 동일함.

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개업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개업증서의 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제168조 보험업이 제138조 제1항, 제3항, 제5항 또는 제2항이 규정하는 방법 중 업무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대만폐 90만원 이상 4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보험업이 제138조 2의 제2항, 제4항, 제5항, 제7항, 제138조 3의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이 규정하는 방법 중 배상준비금 인출한도액, 인출방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대만폐 90만원 이상 4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정황이 엄중한 경우 보험업 신탁업무의 경영허가를 폐지할 수 있다.

보험업이 제143조를 위반한 경우 신대만폐 90만원 이상 4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업 자금의 운용에 있어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신대만폐 90만원 이상 4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그 책임자의 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그 영업허가증을 폐지할 수 있다.

一. 제14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7항 또는 제6항이 규정하는 방법 중 전문장부의 설치의 관리, 보존 및 투자자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8항이 규정하는 방법 중 보험업의 파생성 상품 거래의 종사와 관련된 조건, 거래범위, 거래한도액, 내부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二. 제146조 1의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이 규정하는 방법
중 투자조건, 투자범위, 내용 및 투자규범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三. 제146조 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四. 제146조 3의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五. 제146조 4의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이 정하는 방법 중 투자규
범 또는 투자한도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六. 제146조 5의 제1항 전단(前段)의 규정, 같은 조 후단(後段)이 정
하는 방법 중 투자범위 또는 한도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七. 제146조 6의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이 정하는 방법 중 투자신
고방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八. 제146조 7의 제1항이 규정하는 방법 중 대출 또는 그 밖의 거래
한도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3항이 규정하는 방법 중 의결
절차 또는 한도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九. 제146조 9의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업이 제146조 3의 제3항 또는 제146조 8의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대출에 있어 충분한 담보가 없거나 조건이 그 밖의 동류의 대출대
상보다 우월한 경우 그 행위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단기
징역에 처하고 신대만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보험업은 제146조 3의 제3항 또는 제146조 8의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담보대출이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금액에 달하였으나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이사의 출석 및 출석 이사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46조 3의 제3항이 규정하는 방법 중 대출한도액, 대출 총 잔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책임자는 신대만페 2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1조 주관기관이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인원을 파견하거나 적당한 기구 또는 전문 경력인원에 위탁하여 보험업의 업무 및 재무상황을 조사하고 보험업이 기한 내에 영업상황을 보고하도록 명령할 시 보험업의 책임자 또는 직원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신대만페 180만원 이상 9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一. 조사를 거절하거나 금고 또는 그 밖의 창고의 개방을 거절하는 경우.
- 二. 업무 또는 재무 상황과 관련된 장부와 문건을 은닉하거나 훼손한 경우.
- 三. 이유없이 조사인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이 부실한 경우.
- 四. 기한이 초과하여 재무 보고서, 재산목록 또는 그 밖의 관련 자료 및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부실하고, 완전하지 아니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규정된 기한 내에 조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업의 관계기업 또는 그 밖의 금융기구는 주관기관이 제148조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할 시 재무보고서, 장부, 문서 또는 거래 관련 자료의 제공에 소홀한 경우 신대만폐 180만원 이상 9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2조 보험업 책임자 또는 직원 또는 타인의 명의로 투자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같은 보험업의 인사, 재무 또는 업무의 경영을 통제하는 자가 자신 또는 제삼자의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보험업의 이익을 손해하기 위하여 보험업의 경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보험업의 재산 또는 이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신대만폐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그 범죄소득이 신대만폐 1억원 이상에 달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신대만폐 2천 5백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보험업 책임자 또는 직원 또는 타인의 명의로 투자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같은 보험업의 인사, 재무 또는 업무의 경영을 통제하는 자가 2인 이상 공동으로 전항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8-3조 제167조 또는 제168조 2의 죄를 범하고 범죄 후 자수하여 범죄소득을 자동으로 전부 국고에 소득재물을 납부한 경우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그 밖의 정범 또는 공범을 체포

한 경우 그 형을 면제한다.

제167조 또는 제168조 2의 죄를 범하고 수사 중 자수하여 범죄소득을 자동으로 전부 국고에 소득재물을 납부한 경우 그 형을 경감한다. 이로 인하여 그 밖의 정범 또는 공범을 체포한 경우 그 형을 2분의 1까지 경감한다.

제167조 또는 제168조 2의 죄를 범하고 그 범죄소득 이익이 벌금의 최고한도액을 초과할 시 소득이익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만약 보험시장의 안정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68-4조 이 법의 죄를 범하고 범죄로 인한 소득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마땅히 피해인에게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 범인에게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만약 전부 또는 일부분을 몰수할 수 없을 시 그 가치 또는 그 재산으로 추징하여 충당한다.

제168-5조 이 법의 죄를 범하고 부과된 벌금이 신대만폐 5천만원 이상에 달하나 완납할 능력이 없고 노역 복역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그 환산 기준은 벌금 총액과 2년의 일수 비례로 계산한다. 부과된 벌금이 신대만폐 1억원 이상에 달하나 완납할 능력이 없고 노역 복역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그 환산 기준은 벌금 총액과 3년의 일수의 비례로 계산한다.

제168-6조 보험업 책임자 또는 직원 또는 타인의 명의로 투자하여 직접 또

는 간접적으로 같은 보험업의 인사, 재무 또는 업무의 경영을 통제하는 자가 한 무상행위가 보험업의 권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보험업은 법원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전항의 보험업 책임자 또는 직원 또는 타인의 명의로 투자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같은 보험업의 인사, 재무 또는 업무의 경영을 통제하는 자가 한 유상행위가 행위 시기에 명백히 보험업의 권리를 손해할 것을 알고 수익을 얻는 자가 수익을 얻는 시기에 역시 그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경우 보험업은 법원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전 두 항이 규정하는 요청에 따라 법원이 취소할 시 수익을 얻는 자 또는 이득을 얻는 자가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득을 얻는 자가 이득을 얻을 시에 취소원인을 알지 못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보험업 책임자 또는 직원 또는 타인의 명의로 투자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같은 보험업의 인사, 재무 또는 업무의 경영을 통제하는 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동거친족, 가장 또는 가족 간에 한 재산 처분행위는 모두 무상행위로 본다.

제1항의 보험업 책임자 또는 직원 또는 타인의 명의로 투자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같은 보험업의 인사, 재무 또는 업무의 경영을 통제하는 자와 전항 이외의 자가 한 재산처분행위는 무상행위로 추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취소권은 보험업이 취소원인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시

작하여 1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행위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168-7조 제168조 2의 제1항의 죄가 돈세탁방지법(洗錢防制法)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중대 범죄인 경우 돈세탁방지법의 유관규정을 적용한다.

제169조 보험업이 제7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액수를 초과하여 보험계약을 한 경우 위반한 부분은 무효하며 그 외에도 신대만폐 45만원 이상 22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9-1조 (삭제)

제169-2조 보험업이 안정기금의 할당에 대하여 기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거절한 경우 주관기관은 정황의 경중을 참작하여 신대만폐 24만원 이상 1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그 책임자의 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

제170조 (삭제)

제170-1조 보험업은 재보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147조가 규정하는 방법 중 재보험의 출수재, 그 밖의 위험분산체제의 방식 또는 한도액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대만폐 90만원 이상 4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적인 재보험업이 제147조 1 제2항이 규정하는 방법 중 업무범위 또는 재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대만폐 90만원 이상 4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1조 보험업이 제144조, 제14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대만폐 60만원 이상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배상 또는 정산인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71-1조 보험업이 제148조 1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대만폐 60만원 이상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업이 제148조 2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설명 문건을 제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설명문건이 규정에 따라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설명문건의 기재내용이 부실한 경우 신대만폐 60만원 이상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업이 제148조 2의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관기관에 기한 내에 보고하고 자발적으로 공개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주관기관에 보고하거나 공개 설명한 자료가 부실한 경우 신대만폐 3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업이 제148조 3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내부통제 또는 감찰 제도를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신대만폐 60만원 이상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업이 제148조 3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내부처리제도 또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대만폐 60만원 이상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2조 보험업은 등기의 취소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자를 각각 신대

만폐 60만원 이상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172-1조 보험업은 주관기관이 감독관리, 인수관리 또는 영업정지 정리의 명령 시 그 이사, 감찰인(감사), 경영인 또는 그 밖의 직원에게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신대만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一. 보험업 업무 및 재무와 관련된 장부, 문건, 인감 및 재산 등의 목록을 감독관리인, 인수관리인 또는 정리인에게 전부 이전하는 것을 거절한 경우.
- 二. 업무와 관련된 장부를 은닉 또는 훼손하거나 같은 보험업의 재산을 은닉 또는 훼손하거나 또는 그 밖의 채권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 三. 채무를 날조하거나 진실하지 아니한 채무를 인정한 경우.
- 四. 감독관리인, 인수관리인 또는 정리인의 질의를 이유없이 거절하거나 그 질문에 허위 답변을 하여 피보험인 또는 수익인의 권익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172-2조 보험업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규정된 기한 내에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일 사실 또는 행위에 대하여 재차 1배 또는 5배의 처벌을 가중할 수 있다.

제173조 (삭제)

제6장 부칙

제174조 사회보험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174-1조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범죄안전의 심리를 위하여 전문법정을 설립하거나 전문가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75조 이 법의 시행세칙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75-1조 우리나라와 그 밖의 국가의 보험시장의 주관기관의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정부가 수권한 기구는 호혜원칙(互惠原則)에 따라 외국정부, 기구 또는 국제적 조직과 정보의 교환, 기술의 협력, 조사 협조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국가 이익 또는 보험에 가입한 대중의 권익을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관기관은 전항의 체결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관련 기관, 기구와 협의하여 법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호혜 및 기밀유지의 원칙(互惠及保密原則)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한 외국정부, 기구 또는 국제 조직에 제공할 수 있다.

제176조 보험업의 설립, 등기, 양도, 합병 및 해산 정리는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상세한 절차를 관리방법에 제정하여야 한다.

제177조 대리인, 중개인, 공증인 및 보험업무원의 자격 조건의 취득, 등록, 등록의 취소, 교육 양성, 징벌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의 관리규칙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78조 이 법의 중화민국 95년 5월 30일에 개정 공포한 조문은 중화민국
95년 7월 1일에 시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